

# 韓國의 失業勞動者 運動 現況과 組織化 展望\*

金 相 坤\*\*

(目 次)	
I. 머리말	IV. 맺음말 - 失業勞動者 運動의 勞動運 動的(組織化) 展望
II. 失業勞動者의 政治經濟的 意味와 運動的 性格	
III. 失業勞動者 運動의 現況과 評價	

## I. 머리말

한국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들 한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당초 예상보다 높은 10.7%에 달하였고 금년에도 10% 수준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지표들도 크게 호전되어 정부와 관변학자들은 한국경제가 이제 IMF체제에서 벗어났음은 물론 그 이전보다 더욱 안정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국 경제 자체의 모순 구조와 현실의 모순적 분배 구조의 두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안이하고 설부른 판단에서 나온다고 본다.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70년대 이후 계속되는 전세계 구조공황<sup>1)</sup> 속에서 미국 경제는 10년이 넘는 장기호황이라는 이상 경제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성장과 호황의 거품이 결국 전세계적으로 더욱 가혹한 '위기의 내재'를 반증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97년 말 IMF구제금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기형적 경제 구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 김성구(1998)에 의하면 1929년 세계대공황을 즈음하여 자본주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단계라는 새로운 발전단계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는데 이 단계에서는 고도의 성장과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 심화라는 두 요인이 함께 성장하였고 결국 이 "구조적 위기는 1970년대 이래 현재화되기 시작하여 현재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 즉 국가독점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무정부성과 생산과 소비의 대립적 발전에서 기인하는 주기적 과잉생산은 극복되지 못했으며 장기적, 구조적 위기는 일층 심화되기에 이르렀다."

조, 즉 대외종속적인 기술력 수준과 자본의존도는 항상적인 경상수지 적자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금융운용면에 있어서도 지나친 단기차입에 의존하여 왔을 뿐더러, 태생적인 한국 재벌의 허약한 축적 구조 등은 IMF체제 탈출을 운운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후자의 경우 '극복'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외형적 성장의 단면과는 달리, 경제회복의 구조와 질이 오히려 더욱 굴절되거나 사회체제 내의 모순과 갈등이 더욱 깊게 뿌리내려 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IMF 체제를 겪어내는 동안 급변하는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중산층의 몰락과 부유층의 축재는 더욱 심화되었다. 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에 따르면 법정 최저생계비(월 23만4천원)에도 미달하는 절대 빈곤층이 1천29만명에 달하고 99년 3/4분기 도시가구중 상위 20%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97년 4.5배에서 5.3배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 외형의 회복(?)으로 금년의 고용 현황은 상당히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자 수(이 계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만<sup>2)</sup>)는 80여만 명 수준(노동부, 2000년 7월), 실질적으로는 100만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2차적인 구조조정과 경기후퇴로 대규모실업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고용의 질은 갈수록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이제 정규직보다 많은 52%를 넘어섰으며 고용불안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고실업하에서 실업복지정책은 예산이 증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등 형식적인 면에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 내실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과 유연화 정책으로 공공근로 등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위주였다. 올해 실업예산의 규모는 3조1천3백4십5억원으로 전년 예산에 비해 약 33.2%가 축소되었으며 순수 실업예산의 경우는 51.8%,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도 99년에 비해 6.2%가 축소되는 등 실질적인 실업복지는 후퇴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실업통계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실질 실업자 수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난점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고용의 질조차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통계방식의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① 실망실업자를 실업자로 보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여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② 취업자로 집계되고 있는 무급가족종사자 속에 상당수의 실업자가 은폐되어 있다. ③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 완전 실업자에 해당한다. ④ 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은 시업자와 다름없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실질 실업자 수를 산정해보면 족히 200만명에 달할 것이라 한다. 민주노총, '정부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 1998년 6월 참조.

이상의 조건으로 미루어볼 때 IMF 체제 2년을 겪어내면서 한국 민중의 삶은 더욱 위기적인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고용의 수준과 질,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의 문제를 어떻게 운동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실업과 삶의 질 문제를 단지 시혜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제반 민간 단체들의 노력이나, 삶의 질 저하가 '폭동'으로 외화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수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관료들의 관점으로는 결코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들, 그리고 여전히 대중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 진보적인 정당운동의 주체들 모두 아직은 지난 3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이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데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갖가지 상황 속에서, 문제의 심각성 속에서 더 이상 실업의 문제와 이로 인한 '살 권리의 박탈' 문제를 좌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와 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의 실업 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문제해결의 주체와 그 주체의 역량을 명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간 각 주체들의 노력과 문제해결 과정에서 재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의 실업문제, 실업노동자문제에 대한 운동적 대안찾기의 시론에 불과할 뿐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 실업대책과 운동주체의 형성 및 투쟁을 만들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실업노동자의 정치경제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실업노동자 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도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업노동자 운동의 현황과 대응책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운동전망을 논술하고자 한다.

## II. 失業勞動者의 政治經濟的 意味와 運動的 性格

### 1. 정치경제적 의미

#### 1) 왜 실업노동자여야 하는가

일자리를 잃은 노동 주체는 실업자, 혹은 실직자, 구직자, 불안정 고용(인력) 등 다양

한 명칭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 각각의 개념들 속에는 사전적 의미는 유사하더라도 각 단어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나열한 개념들 속에서는 역동적인 주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소외된 자들로서의, 종속적 대상으로서의 의미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짧은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 경험 속에서 실업자운동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급증한 실업사태에 실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는 여전히 '무능력자', '사회적으로 구제받아야 할 대상', '시혜와 온정의 대상'일 뿐이지 결코 '변화의 주체', '노동자계급'으로서의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실 실업자와 취업자는 노동자라고 하는 동일한 범주내에 존재하면서 경기변동과 자본의 합리화 속에서 끊임없이 실업과 취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혹은 짧은 취업과 장기간의 실업 상태에서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조건에 놓이는 상황이 된다.<sup>3)</sup> 따라서 실업노동자와 취업노동자는 당장 '직업'을 둘러싸고 처한 조건만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지 '노동자'로서의 본질은 차이가 없는 같은 개념의 연장선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실업자의 의미를 실업노동자로 재구성하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실업노동자'를 분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실업노동자는 "국가와의 교섭이 아니라 노동대중의 다양한 부문들 사이의 민중적·사회적 연대를 실현할, 그리고 하루 아침에 조합원 숫자를 늘리고, 대중적인 동원을 할 수는 없지만, 자주적으로 실업 및 불안정 노동자들의 조직 형성을 지원하고 이들과 연대·투쟁할"(노기연, 2000) 주체를 의미한다.

## 2) 실업노동자의 발생원인과 배경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리고 이 연장선에 놓여있는 IMF체제에서 한국에 던져진 가장 가혹한 시련이 실업과 고용불안이다. 이 실업과 고용불안은 IMF관리체제를 벗어나면 해결될 수 있을까.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 근본 원인은 두가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고용문제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고질적인

3)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7년 '직업으로서의 실업'을 내걸고 '실업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투쟁하였던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문제라는 점이며 또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질적으로 노동에 대한 공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 (1) 자본주의 자체로부터 기인하는 실업 문제

이윤율 하락 경향, 자본축적의 한계, 잉여자본의 과잉, 민중들의 빈곤 등이 현실자본주의의 모습이며 신자유주의하에서 이는 더욱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는 보다 현격히 양분화해가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크게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개별 국민국가들간의 관계로서 이는 발전된 생산력과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으로 과잉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와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초국적자본과 그렇지 못한 제3세계 국가들간의 격차이다. 두 번째는 개별 국민국가의 정부가 민중들에게 행하고 있는 반민중적 행위의 증대이다. 이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 권력의 요체였던 군부세력을 무너뜨리고 민주화투쟁을 통해 민주정부(형식적으로나마)를 수립했던 역사를 역행시키며 내부통합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와 민중간 더욱 격화되는 대립의 양상을 낳게 한다. 세 번째는 (초국적)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면화되며 세계화되는 노동의 문제인데 이는 더욱 열악해지는 재생산 기반과 노동조건의 노출을 내포하고 있다.<sup>4)</sup> 이 전과정의 모순 속에 내재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이윤율 하락'이라는 자본주의 자체의 본질 때문<sup>5)</sup>이며 더불어 이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자본간 경쟁에 기인하고 있다. 이 이윤율저하의 문제는 곧 잉여가치의 문제로 소급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매매되는 상품이다. 이 노동력 상품은 자본가에게 구매되어 자기가치 이상의 가치 즉 잉여가치를 만들어낸다. 이 잉여가치는 고스란히 자본에게 이윤으로 남게 되고 대신 노동자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가치의

4) 한인입,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반노동자성-자유화, 개방화, 세계화, 지구화의 자본주의적 의도는 오직 하나, 이윤 착취와 그 증대에 있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UR에서 IMF, 밀레니엄라운드 까지-자유화, 개방화, 탈규제체제의 재앙과 대안적 논의들-」, 1999년 5월 토론회 자료집 참조.

5) 이윤율 하락의 원인 분석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쟁이 존재한다. 맑스주의 역사학자이며 미국의 트로츠키주의적 정치조직인 Solidarity 그룹의 활동가인 로버트 브레너의 경우 "자본주의 위기가 자본과 노동사이의 계급투쟁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자본과 자본 사이의 경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이윤율 저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윤율저하를 상쇄시키려는 자본의 노동자 공격에 의해 계급투쟁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의 도치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외 좌파 학자와 활동가들은 여전히 고전적인 맑스주의적 해석으로 이윤율저하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논쟁의 이해를 위해 Robert Brenner, "The Looming Crisis of World Capitalism", *Against the Current*, No.77과 정성진, '세계경제위기와 맑스주의 공황론-브레너 비판을 중심으로-', 『진보평론』 창간호 참조 바람.

아주 적은 일부를 임금으로 지불받게 된다. 이러한 메카니즘 하에서 자본은 확대재생산을 위하여(이는 자본간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 통제되지도 조절되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진행된다.) 착취한 잉여가치를 계속적으로 축적해 나간다. 한편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가에게 팔릴 노동력이 항상 있어야 한다.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그리고 원활한 노동력을 공급받기 위해 자본가는 언제나 산업예비군(상대적 과잉인구)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실업자, 즉 실업노동자이다.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끊임없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산업예비군이 항상 있어야 한다. 국가는 산업예비군의 양을 통제 또는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묵살하며 자본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은 체제 자체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결국 실업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다 할 것이다. 더불어 기술개발과 확대재생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의 증대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가중시켜 노동력 방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 광범위한 세계화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의 극대화된 형태가 바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고용조정이었으며 이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2) 구조조정(수량적 고용조정, 기업 내부 합리화)으로 인한 실업 및 고용불안정

한편,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정부가 100%이상 잘 수행했던 양허조항들은 바로 개방의 가속화와 긴축·고금리 정책의 실시, 그리고 폭력적인 구조조정이었다. 긴축과 고금리 정책은 곧 새로운 투자의 위축을 의미했으며 이는 곧 내수시장 침체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는 다시 실업의 증가와 낮은 성장을 야기했다. 내수시장 침체는 결국 내수를 지향하고 있던 기업들의 연속적인 도산을 낳았는데 정리해고라는 이름이 아닌 '도산'과 '부도'로 거리에 나앉은 노동자들의 수가 더욱 압도적이라는 사실은 이를 잘 증명해준다. 이처럼 투자위축-저소비-저성장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동안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과잉투자에 대한 조정과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책임자들은 책임에서 비켜서 있었으며 구조조정은 그야말로 노동자 자르기, 임금 깎기, 국제발행을 통해 기업 및 기업주 살려주기로 정리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98년, 99년의 실업자 수의 증가는 예년의 세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은 물론 고용의 질은 더욱 추락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고용과 실업 사이의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불안정 고용 노동

자충이 폭증하고 있다.

### 3)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노동자 발생이 가져오는 문제점

97년말 한국에 찾아온 IMF구제금융은 외환시장과 국내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를 빌린 것으로 일단락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급작스럽고 위기적인 경제 공황을 만들어냈고 가시적으로는 폭발적인 실업자 양산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우리나라에서 실업이라는 것은 곧 절대적 궁핍을 의미했고 이는 소비와는 무관하게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존 그 자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업은 곧 실질실업자 수 약 350만 명에 이르는 상황까지 치달았는데 이로 인하여 1천만 명이 넘는 수의 절대빈곤층 양산은 다양한 사회문제로 확산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 속에서 실업노동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폭력적이다.

우선, 실업 당사자는 실업노동자의 불안정한 생활과 절대빈곤계층으로의 전락을 겪게 된다. 기업 도산이나 구조조정 하에서 발생한 실업노동자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우 유사한 처지로 곤두박질치게 되었는데 급작스러운 생계비와의 단절은 그야말로 '굶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물론 퇴직금이나 고용보험으로 몇 개월간의 생계비 지급이라는 완충기제가 존재하기는 하나 문제는 기업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퇴직금은 커녕 밀린 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경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그리고 제도 운영상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이나마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는 실업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곧 다양한 문제들을 파생시켰다. 전반적인 고용불안정의 심화, 노동조건외 하락, 노동조합의 약화 등은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정(가정파괴, 아동 및 청소년 방치, 자살률 증가)의 가중을 가져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요의 발생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낳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증폭은 결국 그동안 부분적으로 형성된 사회내부의 민주성을 파괴하고 부익부 빈익빈 사회를 가속화하는 상황을 조성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합리화 공격으로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현장의 민주성과 노동조건 향상을 다시 악화시키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나서야 정부

는 '폭동'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절대빈곤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고 실업급여의 수혜폭을 넓히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하겠다는 등의 사회통합을 위한 외형적 틀을 마련하기에 부산했다. 결과적으로 대량실업의 발생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실업의 문제가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해결되든가 아니면 완충기제의 작용이 성공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민중들은 극도로 암울하고 전망없는 사회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 2. 실업노동자 운동과 노동조합 운동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실업노동자 혹은 그야말로 실업자 운동을 둘러싸고 많은 조직이 존재하며 그 조직들의 활동 기조와 방식 또한 다양하다. 그런데 실업 노동자 조직과 투쟁에 대하여 그 '주체' 문제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이 견해들을 종합하면 결국 실업노동자가 조직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조직화의 외형이 독자적인 실업자 조직으로 존재하든 아니면 노동조합 조직에서 포괄하든, 혹은 다양한 자연발생적 조직으로 존재하든 간에 존재하는 모든 실업자 조직의 유의미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실업노동자 운동은 이제 초기에 불과할 뿐이며 여러 가지 제약된 형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논의와 진행과정 모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실업문제가 향상화되어온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크게 주목할 만한 정도로 성장한 실업노동자 운동은 많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실업노동자 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가에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현재의 실업노동자 조직화의 현황을 일괄해 보면 IMF사태 직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실업노동자들은 우선, 조직력있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고를 막는 투쟁을 벌이면서 그 과정에서 실업노동자 운동을 조직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가장 크게 실업의 고통 속에서 어려워하던 조직들(예를 들면 건설 일용직 노동자나 여성 실업 노동자)의 경우는 독자적인 실업노동자 조직을 건설하였다. 또한 퇴출, 부도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주체가 되면서 소속되었던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의 전술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현대자동차 정치해고자들이 중심이 되어 독자적인 사업체의 창업을 모색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조직화를 둘러싸고 독자적인 움직임이 있는 동시에, 피용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틀 내에서 투쟁하면서 자신의 고용을 지키길 원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소속된 본기업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자력투쟁은 물론이지만 더욱 크고 강력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보자면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말미암아 개별기업의 노동자 전체가 해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해당기업의 일부 노동자만이 해고되는 경우 이들은 대부분 고령자, 비정규직, 여성 등이었다. 이들 고용의 희색지대에 존재하는 노동자층이 바라는 바는 정규직, 남성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이 아님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두 해 동안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살펴볼 때 그 과정에서나 결과에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동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낳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sup>6)</sup>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업 노동자가 주체로 올곧게 서고 자신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스스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앞서 지적하였듯이 실업노동자나 취업노동자나 임금노동자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정규직, 취업노동자 인식의 전반적인 전환은 물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실질적인 사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목적의식적인 역량배분과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종국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되겠지만 오히려 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중대한 과업이다.

다음에서 우리나라 및 해외의 실업노동자 운동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 인식을 더 깊고 넓게 확장시켜보도록 하겠다.

6) 98년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투쟁의 경우 장기간의 파업 끝에 노동조합 집행부는 파업의 핵심대오 중 한 부류였던 여성조합원 다수를 고용승계에서 제외시켰으며 이는 그 투쟁의 유의미성 속에서도 이후 많은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또한 99년 한라중공업 노동조합의 투쟁은 대단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노동조합 집행부는 힘찬 파업 투쟁을 성공적으로 일구어냈으며, 이 투쟁은 승리한 싸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 속에서 가장 열심히 투쟁한 주체들이었던 한라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비정규직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노동조합으로서 거의 초유의 생산직 비정규직 조직임)은 투쟁과정에서 직영노조가 보여주었던 모습 속에서 낭패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김기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한라중공업 파업투쟁',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노동과 대안 27호』 참조-

### Ⅲ. 失業勞動者 運動의 現況과 評價

#### 1. 우리나라의 부문별 현황과 평가

##### 1) 개황

현재 우리나라에 실업노동자가 중심적으로, 대중적으로 모여 이루어져 있는 조직은 건설일용노조와 실업자사업단, 여성실업자로 구성된 '희망연대'가 있다(김태현, 1999). 건설일용노조는 말그대로 일용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모든 소속 노동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으며 IMF직후 가장 큰 피해를 본 대상들이기도 하다. 현재는 다수가 실업노동자로만 존재하고 있는 형편이라 한다. 이 노동조합은 지역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일용노조는 건설일용무료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취업알선과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다수의 신규 조합원이 조합가입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99년 상반기 중에 노조원수가 약 1,000명에서 5천 명 정도로 확대되었고 IMF 기간 동안 조직도 약 10개에서 30여개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공공근로, 판급공사, 지역내 고용 실업대책 등에 대해서 대 지자체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협약을 맺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개입,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지역을 돌아보면 창원 등에서는 공공근로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부천일용노조의 경우도 실제로는 대다수가 공공근로종사자이다.

실업자사업단은 서울북부지역에서 도시빈민운동을 전개하던 활동가들이 모여 고실업에 대한 문제인식하에 나눔의 집, 자활지원센터, 취업알선센터 등의 활동을 토대로 북부실업자사업단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자치구(區)별로 지부를 설치하고 전체 회원은 1,100여명이며 자체적으로 대표를 뽑아 활동하고 있다. 주로 건설일용직과 임시직 여성이 대부분이다. 주요 활동 내역을 보면 지역과 주민에 필요하고 환경과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사업, 숲가꾸기 등) 등이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만들기, 실업자 생활지원 사업, 직종별 모임 및 교육사업, 실업정책 비판 및 대안 제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내고 있다.

희망연대는 자발적인 여성실업자자치회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여성실업자단체이다. 이들은 주로 실업자 상담, 실업자겨울나기 등 실업대책을 전개하던 여성단체들이 사업과정

에서 만들어낸 조직이다.

위의 신규조직들 이외에 기존조직으로서 전해투는 기존의 징계해고자들의 원직복직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에서 정리해고자, 무급휴직자들을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강화하였다. 현대자동차 정투위(정리해고·무급휴직자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위원회)는 사업장 차원에서 조합원 신분을 가지고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형태로 퇴출, 부도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부도기업을 인수하고 협동조합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는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는데 조흥시스템노조가 회사를 설립하여 협동조합 형태로 출범한 경험이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자를 중심으로 음식부자재 공급업체인 '평등세상'을 설립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민간실업대책단체들이 이루고 있는 '구호사업' 중심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실업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업노동자 거리행진, 실업자 동맹 등을 조직화하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중에서는 유일하게 건설노련의 경우 99년 3월 최초의 '실업자동맹'을 결성하였는데 현재는 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국민승리21은 99년 4월 실업대책본부를 결성하고 실업자대회를 수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실직자 거리행진준비위, 대전지역 실업자대행진 준비위, 군산 실업자연대준비위 등에서 조직건설 중에 있다. 그러나 실업자거리행진은 조직노동자나 사회단체의 성원이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실업자동맹(준)도 실업자대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회원의 확대도 기대만큼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 2)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실업노동자 조직화 관련사업은 주로 '고용안정센터'와 '조직국'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제반사업이 실업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은 고용안정센터이며 조직국의 경우는 주로 실업과 고용의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내 고용안정센터는 98년 민주노총 자체 재정의 부족으로 주로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기금을 활용하여 개설하게 되었다. 초기의 고용안정센터 사업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구호사업 중심의 사업 경향에 경도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위의 비판으로 사업목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논쟁이 있

었다. 우여곡절 끝에 추진된 사업은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현재까지의 성과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민주노총, 1999).

우선 실업자 조직화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경남지역에서 공공근로일용노조가 결성 되었다. 건설일용노조는 IMF 이전에 비해 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가 748명에서 99년 2월 현재 4,885명으로 6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28개 지역조직으로 확대되었다. 울산지역은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자, 무급휴직자들을 실업자대회 및 고용안정센터사업으로 조직화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들과의 일정한 교섭을 통해 고용창출을 이루기도 했는데 전북지역의 경우 일용건설관련 고용창출협약 체결이 대표적인 예이다. 부천 및 일부 지역에서 관공공사의 상당부문을 실업자로 채우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데 경남, 전북, 부산 등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역실업대책위 사업으로 지역고용안정센터가 추진되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 안정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맹별로, 혹은 지역별로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연맹단위에는 독자적인 조직이나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지역 단위에서는 비교적 실업노동자 조직화 및 취업상담 등의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울산지역의 경우 '98년에 울산내 제시민사회단체 62개로 울산 실업대책위를 구성하여 상담사업과 결연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울산의 실업대책위는 경실련 주도로 지원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울산지역에서는 실업자신문을 발간하고 있는데 주요 대상은 취업 상담이 이루어진 실업노동자들이며 현재까지 총 3회 발행하였고 1회에 2500부가량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연맹별 사업이나 지역별사업이나 모두 '실업자 재취업'에 대부분의 역량을 할애하고 있으며 실업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조직화 움직임이나 '투쟁을 전제로 한 취업'의 개념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실업과 취업이라고 해봐도 그 질이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실업자 폭동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나 문제는 이러한 실업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소급시키고 따라서 전사회적 시각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는 상이 구체 사업으로 구현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없는 전술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고용안정센터 사업도 결국은 더 이상의 실업이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된다는, 그리고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은 다시 그들의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당위로부터 투쟁을 조직화한다는 전제 속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

하는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에서 고용안정센타가 벌여낼 2000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여전히 짧은 조직 경험 속에서 힘겨운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제고되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민주노총, 2000).

〈표 III-1〉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타 2000년 사업계획

<p><b>A. 목표와 기초</b></p>
<p>㉠ 정부의 실업복지정책에 대한 대안정책 수립-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현실적으로 대폭 삭감된 예산, 미비된 전달체계 속에서 내실있는 사업이 아니라 전시행정 중심으로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 이에 대응하는 노동단체의 실업극복역량을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시행방안마련 역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나 현재의 준비정도로 볼 때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노동진영의 보다 책임있는 정책대안 수립을 통해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한다.</p> <p>㉡ 노동복지운동의 주체세력형성-노동현장에서 해고된 실업노동자들이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이를 조직하고 가능한 사업을 벌여나갈 토대와 단위가 필요하다. 당면한 생활적 요구를 해결해나가고 스스로 자활의 주체로 서기위한 제반 사업들을 벌여나감과 동시에 확대하고 보다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적 틀을 확대 강화한다.</p>
<p><b>B. 실천과제</b></p>
<p>㉠ 정책적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제반 정책과제/민간위탁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위상정립방안/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방안/자활사업 방안/청년실업, 장기실업 등 제반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방안/실업극복운동의 총체적 전략수립</p> <p>㉡ 조직적 과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사업의 강화/각 지역센터들의 사업지원 및 지도/각 연맹산하 고용안정센터들의 지원, 조정/민주노총과 지역주민운동과의 결합력 강화 및 공동사업 모색/전국실업극복단체 연대회의 강화/장기실직자, 정리해고자를 위한 자활사업조직</p>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조직국 사업으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민주노총 조직국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민주노총의 여건상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IMF사태 직후 현격히 감소한 정규직과 반대로 증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도 대부분 비정규직인 측면을 감안할 때, 그리고 전체 취업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상

회하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은 더 이상 미를 사업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히려 민주노총이 직접적으로 비정규직 사업을 충분히 도모하지 못했 다하더라도 비정규직 조직화 문제는 사실 실업노동자 조직화 사업보다 현장에서 훨씬 먼저 제기되었으며 또한 진행되고 있다. 그 좋은 사례로 '지역노조연대회의'를 들 수 있는데 이 조직은 99년 10월9일에 결성되면서 이미 힘있는 지역노조들이 대거 결합하였는데 서 의노, 인쇄, 제화, 서사노, 설계노조 등이 대표적인 조직이다. 이외 현재 12개의 지역노조 가 참여하고 있으며 더불어 몇몇 주요 지역노조(서울지역 상용직 노조, 동부금속노조, 여성노조)가 추가로 참여할 계획이다(김정호, 2000). 이들 노조는 대체적으로 조직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위로부터 조직된 단위 지역 노조들이 아니라 소속노동자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자기 필요에 의해 형성된 그야말로 자생적이며 또한 그 과정에서 수많은 투쟁을 경험한 조직들이며 그 중에는 역사성을 자랑하는 조직도 있다. 이들 조직의 연대체 구성은 이후 조직확대 전망에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조직이 고심하고 있는 핵심적인 당면의 투쟁 과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는 차이가 나는데 주로 '근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재보상 보험법',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 보장법' 등의 개정투쟁이다. 왜냐하면 지역노조연대 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조건은 그 어떤 고용조건보다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이 산업별 노조 틀 내에서 자본가 단체와 일정한 교섭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싸우기에는 매우 힘든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인식에 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조직 이 민주노총에 요구하고 있는 문제는 민주노총 내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이다. 이러한 조직화 기반을 근거로하여 힘있는 산별노조를 건설하는데 큰 몫을 하는 것이 이 조직의 종국적인 목표이다.

이에 민주노총 조직국에서는 그 어떤 시기보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주요한 사업의 몫으로하여 지난 해 6월부터 시작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미조직, 여성노동자 조직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더불어 2000년에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조직화 사업과 더불어 대정부 요구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 〈표 III-2〉 민주노총 2000년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계획

- ① 미조직 조직화 사업방향: 2000년부터 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민주노총의 중심사업으로 배치하고 중장기적인 계획마련과 함께 미조직 노동자 보호조항을 대정부 요구사항에 포함시키고 실제적인 조직화를 위한 인력과 재정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 ② 미조직 조직화 중장기 계획마련: 미조직 노동자(비정규, 영세, 여성) 조직화 전략수립을 위한 프로젝트(99년 9월~2000년 8월)를 추진중에 있고 주요내용은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마련, 외국사례수집, 조직계획 수립, 조직가 양성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 ③ 미조직 노동자 보호조항 대정부 요구화
- ④ 미조직 조직화 재정마련과 인력배치: 조직노동자를 대표하여 민주노총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마련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마련은 조직노동자 5만인 선언과 임금인상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 ⑤ 공무원 노조 조직화

## 3) 진보정당

한편 올해의 총선을 겨냥하고 창당을 준비중이거나 이미 창당한 진보진영의 정당조직에서도 실업노동자 운동과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보겠지만 아직 충분한 고민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정당들의 특성상 조직 노동자의 문제를 중심에 놓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점과 특히 이들 조직 모두 IMF사태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에 빠져있는 조건에서 창당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실업노동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실업노동자층조차도 이들의 유권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주요하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주로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거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노동자들과 도시빈민, 그리고 영세한 주민들의 주거지라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실업노동자에 대한 정책과 조직화 및 실업사태에 대한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후 각 진보정당의 강령과 선거공약에서 자세히 드러날 것을 기대하지만 여전히 큰 보폭을 내딛고 있지 못한 데에는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민주노동당의 실업노동자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조직에서는 지난 해 8월경 '진보정당의 실업대책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sup>7)</sup>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이 조직이 과거 국승21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승21에서 벌였던 실업자 대회 등은 이후에도 이 조직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좋은 사업 중 하나일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실업대책특별위원회는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보정당의 실업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청년진보당의 경우 조직의 특성이나 시작이 민주노동당과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대상도 다소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데 실업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당위적인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지난 98년 여름, 이 조직의 실업대책위원회에서는 ① 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의제를 정책적으로 마련할 것 ② 실업문제 해결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③ 실업자 조직의 건설과 운동의 성장을 도모할 것 ④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운동진영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 의제의 공통분모를 만들어 나갈 것(김삼연, 1998)의 네 가지를 청년진보당(가칭) 창당 준비위의 행동강령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내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점은 실업을 당한 당사자들의 운동과 실업 문제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운동, 이 두가지 운동의 통일을 통한 전체 실업운동의 전개가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4) 민간부문의 실업대책활동

IMF구제금융 직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가 중심이 되어 실업대책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주로 실업자 겨울나기, 무료급식, 쉼터 등이었으며 이러한 구호사업을 중심에 두고 상담과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이 부가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에서는 지역내의 각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지역별 실업대책본부 및 실업대책위 등을 구성하였고 이 차원에서 각종의 구호사업과 상담, 취업알선,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갈현숙, 1999; 김태현, 1999).

한편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98년 6월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하여 전국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민간최대의 실업대책기구가 되어 있다. 현재 실업극복

7) 이날 워크숍에선 실업대책특위 자문위원인 노대명 박사(경제학)가 '외국 진보정당과 실업문제', '한국 실업문제의 성격과 전망' 등 4가지 항목을 기초발제하고 안산공대 이문국교수(사회학) 등 토론자 5명의 발표가 이어졌다.



국민운동은 민간기금을 총괄관리하여 제안사업을 심사하고 실직자 돕기 결연운동, 실직자지원센터 설립 등 목적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약 1천억원의 자금이 모여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미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의 시민운동단체에서는 실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는 위원으로 종교계,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와 21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8개 지역의 주요 민간 단체들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이 조직의 주요 업무는 민간단체의 사업을 제안 받아 심사한 후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로 선정된 지원 사업은 실업자 숙식·의료지원, 취업재교육, 실업극복 캠페인 등이었으며 99년 상반기까지 약 500억원이 지급되었다 한다. 물론 이 재원은 방송과 계좌운동 등을 통한 모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단체의 실업대책운동은 실업문제해소나 대책으로는 본질을 벗어나 있거나 구호사업일 뿐이라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들의 활동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실업자 생계보호 역할을 대신해주는 단순한 구제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그 조차도 제한된 재원으로 인해 전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구조적 비판보다는 온정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국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적이거나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종교단체의 시혜적이고 구빈활동적인 행사와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실업문제에 대하여 총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관점으로부터 시작한다.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외의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호사업들은 그 수준과 질이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 2. 해외의 사례(프랑스의 실업노동자 운동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실업자들이 마르세이유, 뻘-드-갈레, 파리 등지에서 '실업보험기금공단' 사무실을 점거하고 '우리도 연말을 약간은 인간답게 보낼 권리가 있다'는 요구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구체적으로 '연말 보너스 3,000프랑'을 긴급히 지원하라는 내용으로 바뀌면서 시위는 본격화되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되면서 소외된 계층의 외로움은 더욱 커졌고 이러한 소외에 저항하는 실업자 시위는 경찰과의 충돌과정에서 타이어를 태우며 저항하거나 철로를 막고 기차운행을 방해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기차역에 들어가

차량을 점거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시위대의 대표자들은 상젤리제 거리에 있는 고급 호텔과 최고급 식당을 점거하면서 더욱 여론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렇듯 폭발적이었으나 단순했던 저항성 시위가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 계급갈등의 문제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는 사태가 심각함을 인지한 노동자 조직과 시민운동 조직, 심지어 정당조직에서 조차 사회당 정부를 압박하는 구체적인 요구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김신양, 1998; Levy & Aguiton, 1998).

그러나 한편으로 실업자 시위에 동의하고 있었던 각 조직들은 노선과 이해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실업자 시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공산당과 녹색당은 실업자 시위 도중에 사회당 정부가 주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장하였다<sup>8)</sup>. 노조간에도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이 있었는데 민주노조 및 노동자의 힘 진영과 노동총동맹, 새로 대두한 쉬드(SUD)가 다른 진영이 되어 대결현상을 보였다. 더구나 민주노조는 실업자에 대한 노조의 공식 대응을 두고 내분 현상을 빚기도 했다. 민주노조는 전통적으로 사회당을 지지하는 노조이며, 현재 실업보험기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다소 수세적일 수밖에 없었다. 실업자 시위에 민주노조는 현 위원장의 노선에 반대하는, 주로 철도원과 트럭 운전수들로 구성된 운수노조만이 '투쟁민주노조'라는 이름으로 시위대열에 참가했을 뿐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스팽은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되었는데 환경부장관이 실업기금고 사무실을 점령하고 있는 실업자들을 끌어내기 위해 기동타격대를 동원한 것을 비난하자 조스팽 수상은 그에게 신중하라는 주의를 줄 정도였다.<sup>9)</sup>

이렇듯 97년 연말 프랑스와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은 의도적으로 조직된 시위는 물론 아니었고 자연발생적이었으나 이같은 대오의 투쟁이 벌어지기까지 비교적 오랜 경험과 조직화의 과정이 있었음을 놓칠 수 없다. 프랑스 실업자운동의 역사를 일괄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실업자를 책임진 최초의 기구는 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노동총동맹)였다. CGT는 유럽의 어느 연맹보

8) 그러나 프랑스 공산당과 녹색당의 관료주의성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은 이들 당이 프랑스 실업자 시위에 대하여 이렇듯 강경한 자세로 사회당을 압박하는 행위가 그들 조직 본연의 정체성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예상치 않았던 대규모의 시위에 놀라 초기의 멍청거리던 자세를 바꿔 정치적 견제의 측면에서 사회당을 비판했다고 주장한다. (Levy & Aguiton, 1998)

9) '녹색당에 보내는 옐로우 카드'(Carton jaune pour les Verts), *Le Nouvel observateur*, 22~28 janvier 1998. 이학수, 한국노동연구원, 『구조조정기의 사회갈등 원인과 해소방안-프랑스 실업자 폭동의 원인과 대책-』, 1998.4에서 재인용.

다도 급진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노조는 유일하게 실업자를 계속 조직화하고 80년대 초부터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약하고 분열되어 있는 프랑스의 특성상 이 조직은 제한적인 성과만을 거두게 되었다. 그것은 20년이상 대량 실업이 진행된 결과 실업자와 노동조합의 상황이 너무 이질화되어 버린 것이다.

이후 이러한 한계 인식에 토대를 두고 많은 실업자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80년대 말의 MNCP(Mouvement National des Chômeurs et Précaires)와, Apeis(Association pour l'information et la solidarité)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MNCP는 기독교 운동가나 환경 운동가들에 의해 활성화되었던 지역조직들이 연합하여 만든 실업자와 불안정 취업자들의 국민운동 단체이다. Apeis는 빠리 지역 실업자 조직화에 일조한 공산주의적 경향의 시의회가 주도하여 건설한 조직으로 고용, 정보, 연대를 위한 단체이다. 이러한 단체들의 사업은 주로 낙후된 교외지역 선거에서 극우파의 선전에 대항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과거의 그 어느 조직보다 핵심적이었던 것은 97년의 투쟁과 관계해서 94년 초 형성된 AC!(Agir ensemble contre le Chômage!)<sup>10)</sup>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AC!는 노조활동가(CFDT의 좌파, Groupe des Dix, SUD, FSU 등), 실업자 단체(MNCP는 AC!의 초기 소속단체), 소외에 대항한 투쟁단체(DAL, 무주택자 위원회), 노동자연맹이나 인권연맹, 다수 지식인 등을 연합하여 연립운동을 형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조직된 AC!는 94년부터 시작하여 96년 실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캠페인을 만들어냈다. 특히 AC!가 주도한 최초의 '실업에 대항한 행진'은 빠리에 약 3만 명이 모이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실업자들이었다. 이후 이 운동은 소외된 계층들이 관련된 모든 영역의 문제에까지 운동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95년 봄에는 드라공 거리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점거하는 상황으로까지 진전되었다<sup>11)</sup>. 결국 프랑스에서 실업자들

10) 불어로는 '아세'라고 발음하는데 이는 assez와 발음이 같아 '이젠 진저리나'라는 뜻을 함축한다. 김신양 편역,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 두리출판사, 1998.10 참조.

11) 뿐만 아니다. 95년 12월 획기적인 투쟁이 벌어졌는데 이는 다름 아닌 '권리들이 나선다'(Droits devant; DD)라는 이름의 운동단체가 주도하여 보부르그(Beaubourg)읍 점거와 '없는 자들의 선언'(manifeste des Sans) 발표가 행해진 사건이었다. 이 때는 철도 노동자들의 대파업이 벌어지고 있던 절정기였다. 이 사건을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두가지 점에서인데 하나는 당시의 총파업 투쟁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노동조합들이 이 행사의 전체집회에 대거 참석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의사표시의 양식이 새로워졌다는 점이다. 즉 이 집회의 결과물로서 권리들(시민적, 정치적 및 사회적)이라는 관념 및 그와 더불어 그것의 부정에 대한 관념 즉 무권리, '권리의 죽음'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무권리, '권리의 죽음'이라는 개념이 마침내 이 운동에서

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97년 겨울이 닥쳐왔는데 그해 봄 이미 '유럽행진'이 이루어진 바 있다. 수십 명의 프랑스 실업자들은 두달 동안 유럽을 횡단하며 다양한 국가에서 열린 대중 집회의 분위기를 돋우거나 노조활동가, 의원, 언론인을 만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sup>12)</sup>.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벨기에와 네델란드, 영국의 노동자들과 단체들이 각자 다른 조건에서, 다른 수준으로 이 행진에 동참하였다. 이 운동으로 유럽의 실업자들은 국가를 초월하여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또한 수천만 명의 소외계층을 양산하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만 우선시하는 유럽연합에 반대함으로써 실업자 서로간에 연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실업자 투쟁과 97년의 대규모 실업자 시위는 그간 전반적인 민중운동과 소수자 운동의 성과이자 과정이었으며 그 방식은 주로 거리행진과 시위, 그리고 점거투쟁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유럽 전체의 연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97년 시위를 주도했던 주체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이 운동에서 얻은 교훈들은 첫째, 운동을 이끈 주체가 실업자 자신이라는 점이다. 즉 가장 가난하고 조직화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었던 이들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조직화를 시작하였고 투쟁을 통해 제한적이었으나 요구사항을 관철해 나갔으며 투쟁의 과정에서 다양한 노동자 계층 및 사회계층, 더 나아가 국제적 연대까지 이루어낸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 전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가 주체로 나섰다라는 점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무궁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 이 투쟁을 이끈 실업자들이 전반적으로 후퇴한 프랑스의 사회조건을 반영했다는 사실이다. 실업과 불안정고용의 급증과 이들의 구매력 감소는 이미 프랑스 전체의 사회 문제로 되었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이루어진 투쟁이었다는 점이다(이 투쟁은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70%에 달하는 지지를 얻었다 한다.). 셋째로는 실업자투쟁을 둘러싸고 각 노조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중심적인 주제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러한 운동은 결국 현재 프랑스의 모든 소외된 자들의 운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성장하였으며 당시까지 아직 맹아적 단계로 남아있던 '실업자 운동'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컸다. Catherine Levy & Christophe Aguiton, "유럽의 경기 규칙을 뒤엎고 있는 '실업자 운동'", Le Monde Diplomatique, 1998.2 참조.

12) 97년 5월에는 '프랑스 은행(Banque de France)' 점거가 있었다. 이곳은 금융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장소로 간주되고 있는 곳이다. 이 점거 투쟁에는 실업자 단체들과 프랑스 민주노동총동맹(CFDT)의 은행연맹과, 노동총동맹(CGT)의 금융연맹과 전국조세징수원단일노동조합(SNUI) 등이 참여했다. 앞의 자료 참조.

그러나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그리고 앞에서 지적된 바대로 노동조합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는 측면에서 나타나듯이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를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큰 한계로 지적해야 옳을 듯하다. 프랑스 실업노동자 운동 역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직화사업을 이룬 경험이 여전히 부재한 사실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프랑스의 노동조합운동이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성장해 있는 반면 그 투쟁노선에 있어서는 균형적이거나 계급적이지 못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 3. 실업노동자 운동의 관점과 요구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노동자운동은 다양한 경로와 방식, 그리고 조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다양성에 대해 무시하거나 저급하게 판단할 바는 아니겠으나 문제는 이 다양한 조직들의 활동 양태가 터하고 있는 실업자 문제, 실업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점이 또한 상이하고 본질을 지나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실업노동자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국가에 의해, 자본에 의해 고의적으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관리되고 통제되며 조절된다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의 야기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결코 없어질 수 없는 문제이며 더불어 정부의 '생산적 복지'로도, 민간단체의 구호사업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더불어 현재의 최저생계대책이나 구호사업, 일회적인 일자리 창출 등 극도의 제한된 실업자 관리는 그 양과 수혜의 폭에 있어서도 빈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지만 실업 당사자에게도 더욱 엄혹한 절박함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실업노동자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조직된 실업노동자들의 투쟁사업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운동의 주요한 관점과 요구사항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것은 첫째,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실업은 종국적으로 극복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윤확보에 대한 자본의 무한 경쟁과 이 속에서 발생하는 과잉생산과 공황의 대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산업예비군, 자본의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예비군과 이를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관료기구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며 또한 그 본질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행된 어떠한 형태의 구호사업, 혹은 임시방편적인 실업 조절 행위도 사회적 실업이라는 문제를 흡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한다. 이러한 관점을 분명히 해야만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고용안정을 완전히 이루는 일만큼이나 완전한 구호사업을 이루는 일은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후자의 전술을 채택할 이유는 없게되는 것이다. 이는 그나마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유럽의 고질적인 장기·대규모 실업노동자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그리고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실업노동자들의 양산을 막아야 할 것이며 더불어 기 발생한 실업노동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이 문을 닫아 거리로 나갔은 이들도 있을 것이며 노동조합의 힘이 강하지 못해 투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쫓겨난 노동자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해고된, 정리해고에 맞서 분연히 투쟁하다가 해고된 수많은 노동자들도 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기 전에 이들이 먼저 원상회복돼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또한 더 이상의 '사람 자르기 식' 구조조정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 논의되는 일자리 창출은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당당한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현재의 상담활동, 교육훈련, 재취업알선 사업 등은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치루어지는 행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상담활동과 교육훈련이 어떤 의미가 있겠으며 이 과정에서 구직자 스스로 겪는 소외와 낭패감은 더욱 극심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일자리를 의도적으로 창출하는 작업은 그 어떤 요구보다 실질적인 요구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때 창출되는 일자리는 당당한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 두 해 동안 정부에서 눈가림으로 치루어냈던 인턴사원제 활성화 안이나 공공근로확대 방식은 현재에는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 대상 노동자들 또한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저임금이라는 고용조건 속에서 시달려야 했다.

넷째, 일자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일회적이고 극도로 제한된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먹고 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복지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의 실업 상황에서, 또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 그간 소비와는 거의 무관하게 지내왔던 수많은 소외계층들에게 절대 빈곤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절실한 현실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전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를 확보하는 속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것이며 당장의 고용안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먹고 살' 생계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업노동자들의 투쟁은 만들어져야 하며 조직화의 과정에서 이 관점은 꾸준히 관철되어야 한다.

#### IV. 맺음말 - 失業勞動者 運動의 勞動運動的(組織化) 展望

한국의 현실적 운동 조건과 주체적 역량을 고려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실업노동자 운동의 조직화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했지만 노동조합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한다. 그 이유는 첫째, 실업노동자는 이미 조직되어 있는 취업노동자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실업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이었다. 실업이 향상화, 장기화된다면 실업과 고용사이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노동자층이 두껍게 될 것이므로 실업노동자 조직화 문제를 현재의 노동조합이 우선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올바른 것이다. 둘째로는 현재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민주노조가 그 어떤 운동 조직보다도 왕성한 활동을 벌여내고 있으며 이 역량을 토대로 하여 정부를 압박하는 힘있는 조직으로 성장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타의 다른 조직에서 실업노동자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해당 주체이기도 한 노동조합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간다면 더 이상 좋은 조건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이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많은 운동 세력들이 존재하는 현실에 기반할 때 대단히 제한적인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정당조직, 혹은 다양한 NGO조직들도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실업노동자운동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업노동자 조직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민주노조가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노동조합의 중심성을 전제하며 실업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으로 실업자노동조합의 결성, 지역조직화, 연대전선의 형성 등을 제시하고 이 각각을 전망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1. 실업자 노동조합의 건설과 조직의 집중화

앞서 몇몇 사례에서 지적되었듯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실업노동자를 해

당 기업 노동조합에서 모두 포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장애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위노조에서 자신의 조직에 있다가 실업 상태로 방치된 노동자들과의 연대에 어떤 입장이나 행보도 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아니며 오히려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포섭활동과 조직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의 몰아치는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의도적으로 배출해내는 실업노동자들의 문제를 몇몇 대사업장 노동조합조차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계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약 속에서 가능한 조직화의 가능성을 살펴보면 첫째, 연맹이나 산별 노조를 중심으로 하여 초기업 단위의 노동조합 틀로 실업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다. 현재 이 문제는 법제화의 문제와 관련해 압초에 부딪쳐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하는데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한 문제로 남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필요한 시기에만 등장하는 협상 카드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매 투쟁에서 다루고 공감을 형성하며 구체적인 조직화사업으로 실질화 시키기만 한다면 시기를 당기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둘째, 독자적인 실업노동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함께 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이러한 사업은 비교적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일용노동조합이나 공공근로노동조합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겠다. 이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신이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조직건설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결의가 조직화로 모아진 것이다. 즉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서만 조직은 쟁취되어야 하며 쟁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준 소중한 경험들이다. 한편 앞에서 예시된 조직들은 공통의 사안이나 계기들을 통해 조직화의 가능성을 일정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출발한 조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미조직 실업노동자들(신규 청년 실업노동자들, 중고령 실업노동자들 등)의 조직화는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해 실천적인 연구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노동자 조직들이 강고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그들의 요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이 산별 중앙으로 집중되고 투쟁이 단일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집중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 조직화된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포섭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며 또한 계급적 산별노조의 관점과 입장 없이는 대단히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 2. 지역차원에서의 조직화

한편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의 주요한 골간 조직인 지역본부를 활용하는 것도 조직화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현재 지역 차원에서 실업노동자 문제를 고민하는 수준이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업노동자 관련 사업은 단순한 상담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조직화사업까지 다양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직사업에는 근거리가 주는 친밀성과 동질성, 이로 인한 연대와 조직화의 용이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저단위 조직화로서는 지역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이라 하겠다. 최근에 지역노조 조직이 하나둘씩 증가하면서, 그리고 그 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조직건설 방식이 매우 유의미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층이 점점 두꺼워져가고 있다.

더 나아가 산별노조로의 경로를 구체화하는 관점에서 '소산별노조'의 맹아로서 지역노조를 상징하는 시각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사회진보연대, 1999).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견해는 우리나라의 민주노조 설립과 투쟁과정에서 나타났던 특성과 영향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짧게나마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자면 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의 지역공동투쟁이 노동운동에 끼쳤던 영향과 배경을 살펴보자. 87년의 경험을 토대로 조직적 준비를 갖춘 88년 임금인상 투쟁은 지역공동투쟁의 힘을 실감할 수 있게 하였는데 노조운동에 대한 권력의 압박이 일상적이었던 상황에서 한 개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곧바로 인근노동조합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고 여기서 노동대중의 지역적 단결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 87년을 통해 어용성이 대중적으로 폭로된 한국노총과 기존의 산별연맹은 이 당시 들불처럼 결성되는 신규노조의 기대치가 될 수 없었고, 그래서 신규노조는 미숙한 노조운영 문제조차도 상호교류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 이 노력의 결과로 '지역노조협의회'가 생겨났다. 이 '지노협'은 공단을 지역적 배경으로 제조업 부문의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탄압에의 공동대응을 기반으로 결성된 것인데 87년부터 89년말까지 10개 지역에서 결성되어 민주노조 운동의 구심이 되기에 이르렀다(노기연, 1999). 현재의 민주노총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과 급진성의 기원이 이러한 역사

에 더해 있다는 사고가 '소산별 노조'의 맹아로서 지역노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지역만 해도 업종과 노동과정의 동질성에 기반하여 여러개의 지역노조가 산재해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역사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설립과정에서의 투쟁성과 자주성으로 인해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조차 세인의 관심을 얻고 있는 동시에 어느 조직보다 강고하게 결합되어 있다. 지역조직을 골간으로 한 실업노동자 조직건설은 업종별, 혹은 산업별 노동조합 건설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 3. 조직부문별 연대투쟁, 공동전선의 강화

현재 운동의 주체 조직들이 실업노동자 조직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화와 함께 가야 할 것은 요구의 단일화와 집중화이며 이는 종국적인 목표인 실업노동자 투쟁을 통한 요구의 관철로 이어져야 한다.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만들어낸 실업노동자 조직, 서로 상이한 역사성과 투쟁경험을 가지고 만들어진 실업노동자 조직, 전략에 있어 다소 차이를 가지며 만들어진 자생적인 실업노동자 조직 등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로와 방식, 그리고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만들어진 실업노동자 조직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게다가 이들은 현재에도 각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과 인식하고 있는 필요에 근거해 이 조직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쉽사리 현존하는 이 상이한 조직들을 단시간에 어떻게 통합해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다양한 조직의 존재를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공동의 요구로 공동투쟁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 성과를 어디로 집중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실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직들은 중요한 투쟁시기에 각 단위의 견해차이와 일정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안타까운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너무도 많다. 실업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그 관점이 다양할수록, 조직하고 있는 주체가 많을수록 이러한 공동요구투쟁과 연대투쟁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그간의 조직화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연대는 외연적으로 확장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 더 나아가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단일한 노동자 투쟁으로 외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아직까지 우리는 실업노동자-비정규직 노동

자-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라는 경험을 그다지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실업노동자들이 증가하고 고용노동자의 반수이상인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조직화 전망이 밝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들의 총연대와 단결투쟁만이 실업노동자들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갈현숙 (1999), "정부의 최근 실업정책에 대한 검토," 한노정연, 「현장에서 미래를」, 2·3월호.
- 김삼연 (1998),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진보당의 관점과 행동," 청년진보당.
- 김성구 (1998), "현대자본주의: 위기와 위기론,"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 김신양 편역 (1998),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 두리출판사.
- 김정호 (2000),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해야 할 역사적 임무," 노기연, 「민주노동과 대안」, 27호.
- 김태현 (1999), "실업자 조직화와 투쟁방향,"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000), 「민주노동과 대안」, 27호.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1999), 「99년 정세와 노조운동의 투쟁과제」.
-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1999), 「99년도 제3차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담당자 회의 결과 보고」.
- 민주노총 (2000),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 민주노총 조사통계국 (1998), 「정부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
-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실업운동정책생산모임 (1999), 「실업자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과학사.
- 이학수 (1998), 「구조조정기의 사회갈등 원인과 해소방안: 프랑스 실업자 폭동의 원인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1999), 「1999년 고용동향」.
- 한인임 (1999),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반노동자성: 자유화, 개방화, 세계화, 지구화의

자본주의적 의도는 오직 하나, 이윤착취와 그 증대에 있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UR에서 IMF, 밀레니엄라운드까지: 자유화, 개방화, 탈규제체제의 재앙과 대안  
적 논의들」.

현장에서 미래를 (1999), 「진보평론」 창간호.

Beaumont, P. B. (1992), *Public Sector Industrial Relations*, Routledge.

Brenner, R. (1998), "The Looming Crisis of World Capitalism," *Against the Current*, No. 77.

Compston, Hugh (ed.) (1997), *The New Politics of Unemployment: Radical Policy Initiatives in Western Europe*, Routledge.

Levy, C. & Aguiton, C. (1998), "유럽의 경기규칙을 뒤엎고 있는 실업자 운동," *Le Monde Diplomatique*.

Marx, K. 「자본론」, 김수행 옮김(1995), 비봉 출판사.

Roberts, B. C. (ed.) (1979), *Towards Industrial Democracy: Europe, Japan and United States*, Groom Helm Ltd.

Schor, J. B. (1992), *The Overworked American*, A Division of Harper Collins Publishers Inc.

## A Study on the Korean Unemployed Workers' Movement and their Organizational Outlook

Sangkon Kim\*

### ABSTRACT

Korean workers have suffered mass unemployment and severe instability of employment due to both the governmental policy of the neo-liberal internalization and the management of IMF from the end of 1997. Many workers were discharged because of bankruptcy and the structural adjustment including managerial rationalization. Unemployed workers have given their efforts to the several things such as searching new jobs, collective appeal to their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etc. Their efforts resulted partly in the collectivization and the collective movement. Many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s and religious bodies supported them.

But unemployed workers' groups have not continuity and strength in substance of unemployment. Therefore their groups need various supports from the other organizations of social movement, especially from the established trade unions. Trade Unions can include the unemployed as their members. But in our country the related law has forbidden the union membership of the unemployed.

Unemployed workers' movement must be performed for the followings. First of all, they must build up their unions and fight for the removal of

---

\*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lawful obstacles. Secondly, they must do their best for the acquisition of their social rights. Thirdly, they have to do their movement jointly with another trade unions and CSOs with local solidarity.

In conclusion, the new era of the unemployed workers' movement has begun recently in our country. And the possibility of their union organization can be found for the restoration of their rights through their continuous activities.